

2015년 한국금융학회 특별정책심포지엄

핀테크 시대 금융자율화와 민간금융의 정착

2015년 6월 5일

윤석헌(숭실대 금융학부)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목 차>

제 I 절 서론

제II절 금융시장: 금융자유화의 정착

제III절 금융회사: 민간금융의 정착

제IV절 금융빅뱅과 개선방안의 모색

제 V 절 결론

제 I 절. 서론

1. 문제의 제기
2. 핀테크 시대의 관치금융
3. 금융억압과 관치금융의 악순환
4. 정부 리스크와 정부의 역할

1. 문제의 제기

- ❖ 한국금융의 당면과제는 관치금융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금융자율화 및 민간금융을 정착시키는 것
 -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금융을 산업정책의 지원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14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기여
 - 그러나 한편으로 금융산업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여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 금융시장 성숙도를 전세계 80위로 평가
-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는 Top-down 방식의 금융정책을 지속
- ❖ 그러나 향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Bottom-up 방식으로의 금융의 환골탈태가 필요
 - 미래 한국금융의 비전은 독자적 산업으로 성장·발전하는 것
 - 다만 금융은 실물경제 지원이 그 기본 업무
- ❖ 본 발제는 핀테크(Fintech) 시대에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자율화 및 민간금융 정착방안을 논의

2. 핀테크 시대의 관치금융

- ❖ 해외의 핀테크는 고객의 금융 니즈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Bottom-up 방식**
 - 핀테크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투자가 소요되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분석기법 활용 등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에 따른 위험 관리가 중요
 - 이는 수요자 중심의 금융을 의미
- ❖ 한국의 핀테크는 정부가 slogan화 하여 산업정책으로 이끌어 가는 **Top-down 방식**
 - 핀테크 산업을 일으켜 국민들이 편익을 체감 · 향유토록 하는 공급자 중심
 - 4단계 추진전략: ①핀테크 산업 진입장벽 완화, ②생태계 조성, ③규제패러다임 전환, ④Emergent Fintech 활성화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 (금융위, 2015)
 - Traditional Fintech: 금융회사 업무 지원 IT 서비스, 정보기술솔루션, 금융소프트웨어 등
 - Emergent Fintech: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송금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3. 금융억압과 관치금융의 악순환

❖ 변형된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Mckinnon(1973), Shaw(1973)

- Slogan화된 금융정책: 창조금융(기술금융, 핀테크), 녹색금융
- 과도한 정책금융 규모, 정부의 금융기관 소유 지속
-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주도
- 금융시장 진입 및 퇴출규제 하에서 금융기관들의 rent seeking
- 가계부채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 저금리의 명암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급증- 은퇴자/고령자들의 소득 감소로 소비둔화- 고위험 투자 유인 촉발- 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좀비기업 연명-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부도위험의 감소- 채무자 가계의 소비 여력 증가- 기업의 자본비용 절감으로 경기 부양효과- 정부의 재정적자 이자비용 감소- 원화 강세 억제 내지 외환유입 유인 감축

- (가칭) 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한 투명한 방식의 거시적 정책조율 필요

❖ 관치금융의 악순환

- 정부의 시장 개입 ⇒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왜곡 및 금융회사 책임경영 미정착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 정부의 재개입

4. 정부 리스크와 정부의 역할

❖ 정부 리스크

- 정부의 비대칭적 정보, 특히 고객 정보 부족
 - 안심전환대출
- 강력한 행정력은 정보비대칭성 하에서 잘못된 쏠림현상 초래
 - 저축은행의 8.8 클럽
- 정부는 정책과 감독실패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
 -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동양사태
- 정·관치 금융과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의 핵심요인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선수나 코치가 아니라, 제도 설계자 내지 심판의 역할
- 금융산업 육성보다 금융시스템의 올바른 디자인
- 시장실패 대응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하부구조 구축
-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구축이 기본

제 II 절. 금융시장: 금융자율화의 정착

1. 금리와 수수료 자유화
2. 시장의 왜곡 I : 가계부채와 안심전환대출
3. 시장의 왜곡 II : 기술금융
4. 기업 구조조정 효율화

1. 금리와 수수료 자유화

❖ 금리 자유화

● 현황

- 2004.2월 은행 당좌예금 제외, 요구불예금과 7일 미만 저축성예금 금리 자유화
- 대출금리 형식적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중간대(예: 10%대)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존재: 최근, 여전사 신용대출 연체금리 문제로 여전협회 특별감사

● 문제점

- 2005년 이후 금융권 수익성 하락세 지속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받지 못하면 금융혁신의 유인이 사라져 중개기능이 제한되고 금융발전에 장애요인
 - * 예: 꺾기와 신용할당
- 외부의 금리와 수수료 결정 개입은 자의성 배제가 어려워 시장의 도덕적 해이(왜곡된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부르고, 결국 국민부담 확대를 초래
- 금융권 내 자체 방어를 위한 암묵적 담합이 형성되는 것도 문제

● 개선방안

- 금리 결정권을 시장에 돌려주되, 담합 규제 방안을 마련
- 경쟁정책적 문제가 없다면 금리·수수료 수준은 존중할 필요

❖ 수수료 자유화

● 현황

- 수수료는 금리와 더불어 자유화 되었으나 창구지도가 지속되면서, 수수료 지불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존속

* 예: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의 타행환 수수료 자율화 에피소드

-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이 기술발전과 규제변화를 반영하여 진화되면서 예대업무 일부가 이자이익 대신 수수료 이익 창출로 변환

* 예: 지급결제 수수료 (DeYoung and Rice, 2004),
거래형 금융(transaction banking, TB) 관련 수수료 (Standard Chartered, 2012)

● 문제점

- 수수료 징수의 어려움은 금융혁신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금융산업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도 걸림돌
- 금융권 내 자체 방어를 위한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암묵적 담합도 문제

● 개선방안

- **중개기능 혁신을 위해서 금리와 수수료의 다양한 조합을 허용하고 장려할 필요**

* 예: 대출약정(loop commitment) 수수료, TB 관련 수수료

2. 시장의 왜곡 I : 가계부채와 안심전환대출

❖ 현황

- LTV와 DTI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속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
 - 작년말 기준 1,089조원(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164.2%로 OECD 평균치 133.5% 크게 상회)
- 지난 4월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총 40조원 공급; 1차는 20조원 모두 소진, 2차는 80%만 소진
- 이런 가운데 4월 중에도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사상 최대폭(8.8조원) 증가 시현

❖ 문제점

- 가계부채 확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금리인하의 걸림돌로 작용
 - 다른 내수부분의 소비위축으로 경제성장 둔화 초래 가능성(Reinhart and Rogoff, 2013)
- 금리 및 상환방식 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안심전환대출 전환을 강요한 것은 신관치
 - 원리금 합계 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들 보다 구조조정 우선순위가 낮은 안전계층이 우선 수혜
 - 과거 정부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했던 소비자 상대적 박탈감

❖ 개선방안

- 가계부채 총당금 내지 거시건전성 분담금 요구 등으로 금융회사 신규 대출 자제 유도
- 금융회사 보유 주담대 유동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담 선제적·자율적 경감 유도
- 가계부채 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 표시와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제시도 필요
- 현 시점에서 만약 책임한정 주담대 제도를 사후적으로 도입할 경우, 이는 또 다른 정부 개입이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촉발하여 체제적 위험 야기 가능성

3. 시장의 왜곡 II : 기술금융

❖ 현황

- 기술금융은 신용이 아니라 기술을 담보로 하는 대출
-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은행의 기술금융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성 평가 등 자의적인 방식을 은행권에 요구

❖ 문제점

- 금융당국의 단기실적 위주의 획일적 추진은 “무늬만 기술, 보여주기식 기술”을 강요하여, 쓸림현상을 초래하고 결국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대한 의뢰물량 과다로 신용평가 부실화 우려

❖ 개선방안

- 기술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상환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 기능의 향상/정착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에 정책적 초점을 집중
- 한편 기술금융 지원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VC 및 M&A 등)를 통한 지원 바람직
- 단기적인 지원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적극 활용할 필요
- 시중은행을 통한 지원은 TCB 확충 등 위험관리 역량 개선 등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적절

4. 기업 구조조정 효율화

❖ 현황

- 기촉법은 정부가 채권단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hands-on하는 수단
- 최근 논의되는 기촉법 상설화는 정·관치 금융의 통로 상설화 및 자율적 구조조정 기능 위축
 - 동양그룹: 대주주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남
 - 경남기업: 정무위 위원들의 압박으로 감독기구가 구조조정에 개입

❖ 문헌연구

- 김석진 · 변현수(2004): 워크아웃의 경우는 표본기업 51%가 성공기업으로 분류되고, 법정관리는 54%가 실패기업으로 분류
- 김민철 · 기현희 · 최경아(2013):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기업들간 성과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 문제점

- 채무자 주도의 회생계획(법정관리) vs 채권단 주도의 MOU(기촉법)
- 기촉법의 경우 공적채무조정 기구에서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조정기구로 변질, 특히 정치적 판단이나 외부 압력에 취약

❖ 개선방안

- 기촉법 절차 대신 사적 채무재조정(자율협약) 활성화 유도
- 법원의 절차를 사실상 처벌하는 자산건전성 분류나 거래소 상장규정 등 재검토

제III절. 금융회사: 민간금융의 정착

1. 정책금융의 규모와 효율성
2. 정책성금융(정부소유은행)의 성과
3. 통합산은
4. 수출입은행
5. 우리은행 매각: 국민주 방식
6. 인터넷뱅크 신설
7. 낙하산 폐지 및 지배구조 개선

1. 정책금융의 규모와 효율성

❖ 현황

- 우리나라는 정책금융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관계부처 합동, 2013; 아래 표)

국가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
정책금융/GDP(%)	12.14	7.33	-	0.99	0.83	-	0.45	0.03
공적보증/GDP	7.32	5.84	3.04	-	0.52	0.48	0.10	-

주: 2007-2012년 평균, 정책금융은 보증과 정책자금대출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를 구정환(2014)에서 간접인용

- 2011년 이후 정책금융 비중 상승세: 10.6%('11) → 14.2%('12) → 14.9%('13)

* 정책금융은 2012년말 기준 은행산업 전체 대출자산의 25% 차지

- 정책금융을 정책자금과 정책성금융으로 구분

구분		세분	공급기관
정책금융	정책성금융 (정책금융기관)	정부의 지급보증, 자체조달, 운용	통합산은, 기은, 수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정책자금 (특정목적, 기금형태)	정책자금대출	중기청, 중진공, 기타 정부부처
		보증	신보, 기보, 지역재단
		투자	모태펀드

❖ 문제점

- 정책자금 운영 효율성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지적
 - 중복지원(업체중복, 사업중복, 직대+보증): 국회예산정책처(2012), 우석진(2013)
 - 반복지원: 국회예산정책처(2012)
 - 과소지원
 - 운전자금 중심의 지원: 국회예산정책처(2012)
 - 일정한 업력(창업기업 및 업력 10년 초과 기업 등) 선호
 - 낮은 금리 지원은 민간금융을 구축하는 문제: 이기영·조영삼(2011)
- 산업지원특성 조준분석 결과, 정책자금 목표달성 여부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
 - 김준기 외(2012)는 중진공 정책자금 성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장우현(2013)은 중진공, 기보, 신보 중 기보만 목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개선방안

- 정책자금의 목표와 평가기준의 명확한 제시 필요
- 다양한 정책자금들의 컨트롤 타워 지정·운영 필요

2. 정책성금융(정책은행)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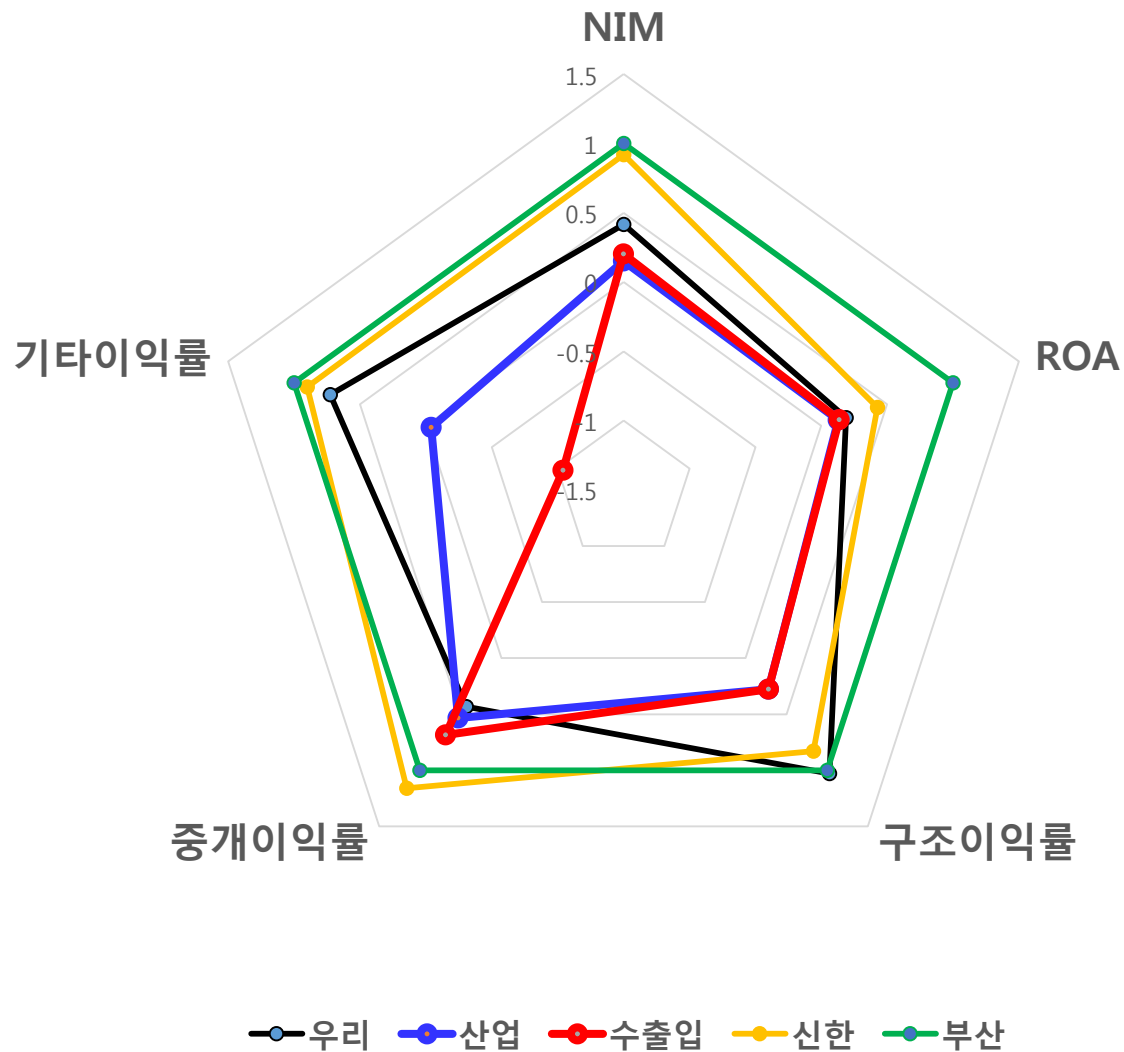
❖ 이론

-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2002): 정부의 은행소유는 경쟁저하, 금융산업 불안정 지표들과 높은 상관성, 관치금융은 금융의 효율성 저하
- Cole(2005), Dinc(2005): 정부소유 은행이 상업성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정치적 배려로 신용배분한 것은 결국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귀착

❖ 성과평가의 어려움

- 정책금융기관들의 목적조항이 포괄적이어서 성과 평가의 지표로 부적절
 - 산은(산은법 1조): 이 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은(수은법 1조):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책은행들은 공공성과 상업성의 이중성 추구
 - 한편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 추구
 - 또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으로서 시장에서 민간 금융회사들과 경쟁

❖ 일반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성과 비교(표준오차 기준)



❖ 일반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성과 비교(표준오차 기준)

	NIM	ROA	구조적 이익률	중개이익률	기타이익률
우리	4.91	1.38	5.34	0.90	1.80
기업	8.32	2.74	5.98	3.36	0.11
산업	1.80	0.94	1.44	1.11	-0.10
수출입	2.38	0.99	1.45	1.43	-2.58
신한	10.85	3.13	4.31	2.41	2.23
부산	11.81	7.35	5.19	2.08	2.48

주: 기간은 2004년 ~ 2013년, 중개이익률과 기타이익률의 정의는 윤석현 · 박래수 · 김범(2014) 참조
 자료: 금융감독원

3. 통합산은

❖ 현황

- 2014.5.2일 산은법 개정에 따라 2015.1.1일 통합산은 출범
- 산은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여 기업구조조정 및 창조경제 추진에 필요한 정책금융 서비스 제공

❖ 문제점

- 민영화 정책 포기는 국가 금융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훼손
- 그간 대기업 및 설비투자 지원에 전력한 산은이 창조경제가 필요로 하는 정책금융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려면 내부혁신 필요
- 산은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의 상당부분을 점유(아래 주채무계열 분포 참조)함으로써 해당 부문 민간금융 발달에 부정적 효과

은행명	우리	산은	신한	하나	외환	국민
주채무계열 수	16	14	4	3	2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2015.4.7~4.13

❖ 개선방안

- 정부소유은행으로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을 솔선수범할 필요
- 대우증권 매각 조기 추진
- 당분간 산은은 기업구조조정, 온렌딩(on-lending) 및 벤처펀드 집중
- 정책금융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바람직

4. 수출입은행

❖ 현황

- 수은은 경남기업 관련 최대 손실 부담 (제3차 워크아웃 시 확정채권 기준)
- 모뉴엘 관련 여신 1,135억원 (국민, '15.5.7)
- 성동조선해양, 3천억 단독 지원 및 손실 단독부담 약속 (한경, '15.5.26)

금융기관	채권금액 (억원)	대출 및 보증 액(억원)	경남기업 지분처분 손실(억원)
수출입은행	2,741	5,210	201.0
SGI 서울보증	1,963	1,740	-
신한은행	1,876	1,740	129.1
무역보험공사	1,114		-
산업은행	598	611	127.6
농협은행	NA	522	57.7
국민은행	469		50.0
우리은행	413		31.0

자료: 경남기업채권단 및 서울경제('15.4.14)

❖ 문제점

- 외부에 취약한 지배구조 하에서 국가 자산의 방만경영 우려
- 이런 상황에 지속된다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존재이유 회의

❖ 개선방안

- 금융기관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철저한 준수 등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 해외 전문 금융인 CEO 영입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

5. 우리은행 매각: 국민주 방식

❖ 현황

- 문헌연구: 정부소유은행의 비중과 경제발전 간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아래 표(윤석헌, 2008)에서 정부소유은행 비중은 국민소득과 부(-)의 관계, 이밖에 중간소득국에서 양자간 유의한 부(-)의 관계가 드러남

1인당 국민소득	저소득국 (1만달러 미만)	중간소득국 (1만달러~3만달러)	고소득국 (3만달러 이상)
정부소유은행 비중 (%)	22.07	10.93	4.68
외국인소유은행 비중 (%)	38.02	45.18	10.40
민간소유은행 비중 (%)	39.91	42.52	83.48

주: 2003~2006년 평균치, 자료: Bloomberg DB, 주요 42개국

- Barth, Caprio, and Levine(2006, p. 208-209)의 실증분석 결과
 - (1) 정부의 은행소유가 은행부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지지하지 못함
 - (2) 은행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시와 개입(hands-on approach)(예; 정부의 은행소유, 강력한 공적 감독, 진입규제, 은행업무 제한 등)은 은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과거 4 차례 매각 시도 실패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금융 주가 하락세 지속
 - 제 4차에서의 분리매각은 부분적 성공으로 평가되나 핵심인 우리은행 매각 계속 지연

❖ 문제점

- 정부가 선호하는 블록세일 (4%씩 분할 매각) 방식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움
- 조직 구성원들 사기 저하가 지속되고, 우리은행 자산 부실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증가하면서 주가하락 요인으로 계속 작용
- 임원인사 관련 잡음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금융산업발전에 장애

❖ 개선방안

- 현재 다음 네 가지 방식 고려 가능: (1) 메가뱅크 방식, (2) 국민주 방식, (3) 국내 사모펀드 매각, (4) 과점주주 매각(블록세일)
- 조기매각이 중요한 상황에서 매각 원칙 수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이제껏 조기매각 외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금융산업발전의 두 가지 조건이 매각 지연의 사유였으나 우리은행 매각만 남은 상황에서 설득력 상실
 - 민영화 실현은 관치금융 탈피를 의미하므로 금융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매각시점 지연은 그 자체 기업가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
-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조기 매각 추진
 - 이 방식은 후일 주가상승 시의 혜택을 국민들이 향유하게 됨
 - 저가발행 시 기존 주주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주인수권 부여
 -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낙하산 임원 및 수익성 미충족 등을 행사조건으로 하는 풋백 옵션 (put back option) 첨가

6. 인터넷뱅크 신설

❖ 현황

- 인터넷은행 신설은 은행의 물적 설비 기준 완화 관련, 과거에도 제한적으로 검토되었음
- 최근 핀테크 바람을 타고 산업자본인 IT 업계의 은행소유 허용을 위한 아래 정책방안 발표
 - IT 업종에 한해 은행소유지분 상한을 30%까지 인정

❖ 문제점

- 인터넷은행 설립과 은산분리 완화는 완전히 별개의 논점
 - IT 업종으로의 제한은 무의미한 규제: 모회사 제약이 없으면 규제 실효성 상실, 모회사 규제는 그 대상이 소수 업체에 국한되어 사실상 처분적 법률의 성격
 - 해외 산업자본이 IT 업체 인수를 통해 은행산업에 진입할 경우, 시장에 잠재적 교란요인
- 인터넷은행 신설의 기대효과 불분명
 - 지급결제업무 개선효과 불확실
 - 인터넷은행이 10%대 중금리 소액대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 개선방안

- 은산혼합에 따른 비용과 혼란 등을 감안하여,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추진

7. 낙하산 폐지 및 지배구조 개선

❖ 현황

- 정부/정치권의 지대 분점 수단으로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지속
 - KB금융 사태 이후 금융회사 모범규준을 요구했던 정부가 한편으로는 낙하산 투하
- 세월호 사건 이후 드러난 관피아와 전관예우 문제 그리고 대주주의 무소불위 지배권 행사(예: 태광, 한화 등) 등은 모두 우리나라 경제금융의 top-down 구조 표출

❖ 문제점

- 낙하산 인사는 금융권 보신주의를 초래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
 - 금융회사 내 '줄서기 문화'가 생성되고 적극적인 위험부담을 회피
 -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은 고객과 시장을 중시하는 bottom-up 경영 대신 top-down 경영을 초래하여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
- 공직자윤리법을 강화 방법은 예외조항 허용 때문에 실효성 저하

❖ 개선방안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조속 입법
- 금융회사 임원 취임 요건에 금융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 요구, 금융회사는 임원 중 퇴직 3년 이내 공직자 명단을 사업보고서에 공개
- 낙하산 임원 선임을 행사요건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들에게 부여

제Ⅳ절. 금융빅뱅과 개선방안의 모색

1. 금융빅뱅

2. 개선방안의 모색

1. 금융빅뱅

❖ 금융자율화와 민간금융 정착을 위해서 한국판 금융빅뱅이 필요

- 이를 위해 독립적인 '금융빅뱅 TF' 구성 및 연구 바람직

❖ Top-down 방식의 악순환

- 정부의 시장개입 지속은 민간금융 구축 내지 유인왜곡 효과
- 금융시장의 자율화 미흡 및 민간금융 책임경영 미정착
- 소비자 피해 지속, 금융에 대한 신뢰도 저하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 정부의 시장 재개입

❖ Bottom-up 방식의 선순환

-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모범을 보일 필요
- 정부는 코치 대신 심판 역할에 주력하여 시장왜곡을 시정, 감독은 강화
- 민간은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보신주의 극복 및 금융혁신 구현
-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2. 개선방안 모색

❖ 개선의 목표 및 세부사항

	금융시장	금융회사
기본방향	-금융자율화 정착	-민간금융 정착
목표	-비대칭 정보 문제 완화/해소 -시장왜곡 교정, 자원배분 효율화 -경쟁촉진과 시장규율 발전 -한국금융에 대한 시장 신뢰 확보	-책임경영체제 확립 -도덕적 해이 차단 -금융의 보신주의 척결 -금융 중개기능 강화로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세부사항	-금리, 수수료 자유화 -정부는 사인간 계약 개입을 자제 -정부는 슬로건 금융(녹색금융, 기술금융 등)의 위험 유의 -기업구조조정에서 정부 영향력 배제	-정책자금 운영 효율성 제고 -정책금융기관 목표 명확화, 지배구조 모범규 준 수용, 경영효율성 제고 -우리은행 국민주 매각 -인터넷은행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추진 -낙하산 폐지 및 지배구조 개혁

❖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므로 금융빅뱅의 핵심은 규제개혁

-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감독체계 개편

- 민간 감독기구 설립을 통한 독립성 확립
 - 현행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여 국내외 금융산업 정책업무를 조화롭게 추진
- 금융감독의 정책 및 집행 업무는 통합하여 금융빅뱅의 기틀을 마련
- 건전성감독과 행위규제(소비자보호 포함)를 구분하는 쌍봉형 체계 선택
 - 현행 증선위의 자본시장 업무는 행위규제 기구로 이관
- 감독유관기관 협의체(가칭,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여 감독 유관기관 들간 업무협력 및 거시건전성감독 역량 강화

제 V 절. 결론

❖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금융빅뱅 필요

- Top 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으로 환골탈태 필요

❖ 금융시장: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금융자율화 정착

❖ 금융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민간금융 정착

❖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므로 금융빅뱅의 핵심은 규제개혁

-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규제개혁의 첫걸음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2013. 8
- 구정한, "정책금융 정보 집중과 성과 평가," 「KIF 금융브리프」, 23권 35호, 금융연구원, 2014.10.4
-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평가」, 2012
-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 보도참고자료, 2015.5.20
- 김민철 · 기현희 · 최경아,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0호, 2013, 1-20
- 김석진 · 변현수, "구조조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제9권 제1호, 2004, 99-129
- 김준기 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및 차별화방안 연구」, 서울대 산학협력단, 2012. 10
- 우석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평가," KDI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13
- 윤석헌,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제," 『경제발전연구』 제14권 제2호, 2008, 157-215
- 윤석헌, "구조조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제9권 제1호, 2004, 99-129
- 윤석헌 · 박래수 · 김범, 「한국금융산업의 도전: 수익성 제고와 비이자이익의 활성화」, 2014년 금융학회 동계(I) 정책심포지엄, 2014. 12. 11
- 윤석헌 · 박래수 · 정재만, 「정책금융 선진화 방안 연구」, 금융경제연구소, 2014. 2
- 이기영 · 조영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11
- 장우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3
- Barth, J., G. Caprio Jr., and R. Levine,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What Works Best,"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13, 2004, 205-248
- Cole, S., "Financial Development, bank Ownership and Growth. Or, Does Quantity Imply Qua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1, 2009, 33-51
- DeYoung, R and T. Rice, "How Do banks Make Money? The Fallacy of Fee Income," *Economic Perspectives*, 4Q, 2004, 34-51
- Dinc, S., "Politicians and Banks: Political Influences on Government-Owned banks in Emerging Countr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7, 2005, 453-479
-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Government Ownership of Banks," *Journal of Finance*, 57-1, Feb. 2002, pp.265-301
- McKinnon, R.,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3
- Reinhart, C. and K. Rogoff, "Financial and Sovereign Debt Crises: Some Lessons Learned and Those Forgotten," IMF Working Paper WP/13/266, December 2013
- Shaw, E.,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3
- Standard Chartered, "Transaction Banking in Asia," Equity Research, 2012.9.14

감사합니다!